

제6회 일본 진단 세미나

- ◆ 주제: 영토 · 역사 · 국가목표 : 일한관계를 중심으로
- ◆ 일시: 2012년 12월 7일 (금요일) 15:00-17:00
- ◆ 장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140-1동 5층 교수회의실
- ◆ 발표: 도고 가즈히코 (교토산업대 교수, 동 대학 세계문제연구소 소장)

■ 발표 내용

안녕하십니까. 도고 가즈히코입니다. 저는 지난 2002년까지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일했는데, 그 34년 중에 거의 절반 정도의 오랜 기간을 주로 러시아와 북방영토 관련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열심히 매달리다 보니 이 북방 영토 문제는 일이라기보다는 저의 인생 자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2002년 이후부터는 주로 외국에 있으면서 여러 대학의 객원교수로 일했고, 2007년에는 이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일본외교에 대해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어서 다시 돌아와 보니 무척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은 교토산업대에서 국제정치를 전문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정치에 관한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의 관심은 좀더 깊은 의미에서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향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외교도 흔들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역시 국제정치란 '한 국가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의 문제를 반영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교적인 관점에서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의 문제를 생각해 볼 텐데요, 끝 부분에서는 최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책도 내고 하는 '일본이 앞으로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테마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일본 외교를 되돌아 보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 저는 2011년쯤부터, 일본 내 분위기를 보았을 때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앞으로 일본이 힘든 시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장 깊이 관여했던 것은 물론 북방영토 문제였는데, 그 북방영토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슈들이 센카쿠와 다케시마 문제에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학자로서 저의 심정으로서는 정말 큰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미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올해 2012년 2월에 '일본의 영토문제: 북방영토, 다케시마, 센카쿠 제도'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 실제로 영토 문제가 심각하게 터지다 보니 일본 내에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한관계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것이고 물론 다케시마 문제도 심각하지만, 다케시마와 센카쿠 문제 중에 더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무래도 센카쿠 문제였죠. 게다가 영토문제 뿐만이 아니라 위안부 문제 등도 역사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영토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 문제가 일본 외교에 있어서는 정말 큰 난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센카쿠 문제

(1) 먼저 센카쿠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지금까지의 세 가지 초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5년에 일본이 센카쿠를 정식으로 영유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1971년까지 센카쿠는 일본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이 일본측의 강력한 인식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대만이 확실한 이의를 제기한 것은 1971년입니다. 그러나 1972년의 일중국교정상화 당시 중국의 총리였던 저우언라이가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해 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그 후 1978년 일중평화우호조약 체결 때 덩샤오핑이 “다음 세대에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영토분쟁의 사실상 유보 상태’는 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점점 유보 상태에 만족할 수 없게 되어, 1992년의 영해법 제정이 발단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본격화되어, 일본의 입장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된 것은 역시 2008년 12월 중국의 어업감시선이 일본이 주장하는 센카쿠의 영해 내에 9시간 동안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 직후 중국 해양감시당국의 대표가 정식 기자회견을 열어 “다오위다오(센카쿠)는 중국의 영토이며, 앞으로 영토에 대한 실효지배의 실적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듣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센카쿠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한 것도 놀라웠지만, 실효지배를 위해 실적을 쌓는다는 것은 곧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영해 내에 실효행사를 하기 위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센카쿠 문제에 대해, 이제는 중국이 협상 외에 다른 방식으로 클레임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이 저희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2010년 어선충돌사건이 일어났고, 2012년에는 센카쿠 국유화를 둘러싼 분쟁이 터진 것입니다.

(2)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일본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전후 67년의 역사 가운데, 정부의 행동 하나가 이 정도로 일본 외교 전체를 약화시킨 사례는 달리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 중국은 들어올 마음만 먹으면 해양감시선이 잇따라 일본의 영해에 들어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이곳은 일본의 영해이니 나가라’고 하면 중국 어선들이 ‘여기는 중국 영해이니 너희들이 나가라’고 되받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중국측에서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영토 문제의 역사 문제화’입니다. 저는 일본측의 영유권 주장은 전면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청일전쟁이 한창이던 시점에 일본이 센카쿠를 영유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센카쿠를 영유한 것은 1985년의 1월인데, 이어서 4월에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일본이 대만을 영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1905년에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영유하고, 1910년에는 한국을 병합했기 때문에 두 케이스는 유사한 순서로 영유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법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가장 약했을 때 빼앗은 영토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는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제 책에서 이런 중국측의 논리도 열심히 소개를 하면서, 일본이 내세우는 ‘국제법적 근거’는 물론 강력하지만 센카쿠 문제에 대해 일본이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이 문제가 터지고 말았죠. 게다가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과 대만의 원래 입장은 서로 달랐지만, 최근 같은 민족으로서 견해가 일치해 가고 있는 듯한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3) 이렇게 되어버린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단추가 잘못 끼워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사건이 일어나 버린 이상은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국제정치학 용어로 말하자면 ‘억지(deterrence)’와 ‘대화(dialogue)’의 균형이 잘 잡힌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지의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지요. 이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조건을 붙이지 않은 깊은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때 일본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 내에 들어오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 무언가를 만들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내세우고, 중국은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를 하기 위해 대화를 성사시키기에는, 현재 일본 외무성의 대응은 유난히 강경한 느낌이 듭니다. 외무성은 '센카쿠에 관한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는 영토의 교섭에 있어 가장 강력한 태도입니다. 또한 이는 과거 소련이 일본과의 영토분쟁에 있어 계속해서 취해 왔던 방침인데, 이는 상대국의 입장에서 보기에 굴욕적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논리 면에서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사실상 유보상태가 되어 있는데도 법률적으로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 버리면 명백한 모순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민당의 선거공약을 보면 굉장히 강경한데요, 심지어는 '공무원의 상주'라는 언급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센카쿠에 대한 현재 중국의 전략은 일견 성공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영해침입이 계속된다면 어딘가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미국은 두 가지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먼저 미국은 중국이 실력을 행사해서 현상을 바꾸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센카쿠가 안보조약의 제5조의 적용범위라는 것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상식적인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요.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먼저 일본의 자위대가 제대로 싸울 것과, 절대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본이 외교적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중국을 도발하지 않을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일본에게 있어 위험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정책으로서, 미국은 주권중립을 유지한다는 자세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센카쿠가 누구의 영토인지는 일본과 중국이 결정할 문제이고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요. 현실주의 시각에서 보면 일본과 중국의 대립은 미국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부 중국 학자들은 센카쿠 문제가 대일 문제가 아닌 대미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포츠담 선언에 '훈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의 큰 섬 네 개와 우리들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이 일본에 반환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이 결정하는 섬들'에 대만과 센카쿠는 포함되지 않으니 센카쿠는 중국의 영토가 맞다는 것이 중국의 주장이지요. 전후 미국 주도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 기반한 아시아 지역질서가 만들어졌을 때, 그 과정에 일본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장은 미국의 입장을 직격하는 것이 됩니다. 국제법으로 보든 현실주의 시각으로 보든, 미국의 주권중립 입장이 동아시아 평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일한관계(다케시마와 역사 문제)

(1) 다음은 오늘의 본 주제인 일한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저는 이 책에서 일본 국민들에게 몇 가지 말하고픈 것이 있었습니다. 우선 1905년에 일본이 다케시마를 영유하고 1910년에 한국을 병합했기 때문에,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다케시마의 영유는 식민 지배의 첫걸음처럼 보인다, 그러니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고 말해 버리면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것이 옳은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더라도, 다케시마에 대한 한국 분들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한국인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 다케시마가 있고 '독도만큼은 절대로 내주지 않겠다'는 이 심리를 저는 '다케시마 동경론'이라는 개념으로 제 책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점들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점들을 꼭 일본에서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65년 일한국교정상화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케시마 밀약'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죠. 최소한 일한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막을 수 없고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할 뿐, 그 이상 논쟁을 벌여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언행은 하지 않는다는 일정한 합의와 장치들은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30여 년이 지나면서 그 장치들이 점점 무너지게 되었고,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1990년대의 김영삼 정권부터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한국 쪽에서 그 실효지배에 대한 실적을 쌓는 듯한 행동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이 책에서도 과감하게 썼지만, 밀약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 문제를 양국관계의 최우선과제로 두려고 했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북방영토의 경우는 이 영토 문제가 항상 일본과 러시아 관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다케시마 케이스와는 커다란 차이점을 보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다케시마 문제는 일한관계의 한 부분이고, 최대한 갈등을 촉발시켜서는 안 되는 문제로서 취급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 '실무적'인 취급의 성과가 1998년의 신어업협정이었는데, 이 협정의 실천이 잘 되지 않아서 시마네현 어민들의 여론에 의해 2005년에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했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 '외교전쟁'이라며 매우 강하게 반발했고, 그 후 2012년에는 한국 대통령이 다케시마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2005년에 '외교전쟁'이라는 강한 단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는 달랐습니다. TV를 통해 방송된 영상은 일본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이죠. 일본인의 눈에는 2010년 러시아 대통령이 북방영토 구나시리섬에 방문했을 때의 모습과 겹쳐서 보인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강력한 반응을 반영해서,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이런 방침에 의문을 느꼈습니다. 저는 여러 곳에 'ICJ에 제소를 하기 전에, 일본이 한국에게 "우선 협의를 합시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단 이 ICJ 제소 건은 양국의 선거도 있어서 일본 정부가 철회를 했습니다만, '선거 우선'이라는 점을 훨씬 넘어서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ICJ에 이 문제를 가져간다고 해도 한국이 그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독도 방문 건으로 모욕을 당했으니 우리도 상대방에게 난처한 문제를 제기해서 모욕을 되갚아주자는 논리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려는 정신이 아니겠지요.

저는 나름대로 다케시마에 대한 한국 분들의 정서와 정당성에 대한 주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토문제에 관해 대화 자체를 거부해 버리거나, 대화할 문제조차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2009년에는 일본, 미국, 한국의 학자들이 모여 다케시마에 대한 신뢰구축조치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일한의 학자들이 회의를 열고 감정적인 태도보다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문제의 법적, 역사적 측면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 보자고 하여, 실증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두고 보면 2012년 여름에 다케시마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역사 문제는 국가의 주권과도 관련되어 있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겠지만, 대화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다케시마와 공존해 나갈 방법을 찾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역사 문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우선 제가 생각하는 일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한국에 대해 '앞으로의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역사 문제는 잊자'는 메시지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측에서 말해야 하는 것은 그 반대이겠죠. '한국이 역사를 잊어도 일본은 절대로 역사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하겠죠.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저는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인데, 그 식민 지배 시기에 역시 일본이 한국에 심한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그에 대해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다음 세대에 전할 필요가 있죠. 이것이 바로 역사 문제에 관해 가장 먼저 일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 분들은 거의 모르실 것 같은데, 전후 일본의 근현대사 교육은 붕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고 지금도 가르치지 않고 있죠. 이것이 저희 세대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학생들에게도 정말 면목이 없죠. 최소한의 사실관계와 좌우의 여러 가지 의견을 공부해서 역사를 스스로 생각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대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출판한 책도 있습니다만, 저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 분들이 생존해 계신 동안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고노 담화 등을 부정해 버릴 경우 한 일관계만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문제가 한국과의 문제임은 알고들 있지만, 이 문제가 일미관계의 근본 역시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점은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한일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한일간에 1965년의 협정을 포함해 일본이 전후처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한 여러 조약에 의해, 정부의 청구권뿐만 아니라 개인의 청구권도 무효화되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온 직후 저는 아사히신문에 '이는 천재일우의 기회이며, 일본 국내 제도에 관해서만큼은 이 문제가 종결되었으니 앞으로는 좀더 전향적인 입장에서 전후 남아 있는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의 글을 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와 민간의 합동기금을 다시 만들어서, 남아있는 문제들을 도의적인 입장에서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하고 주장했던 것이죠. 2011년 한국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뒤에도, 저는 일본이 역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적어도 아시아여성기금 등의 민간기금이 아닌 정부 예산을 사용해서 사죄금과 사죄의 뜻을 표하는 문서 등을 전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가능해졌고,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한국 정부가 끝까지 '범죄 책임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양국의 의견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일본이 져야 할 책임은 '인도적인 책임' 내지는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의 의견으로는, '범죄성'을 분명히 인정하라고 해 버리면, 역시 전후 여러 조약에서의 법적 처리 전체에 대한 부정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인도적 책임'이라고 해 버리면 그야말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한국 측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지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안 중의 하나는, 양측이 그 배상의 성격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일본도 한국도 '국내'가 있기 때문에 양국 정부끼리 서로 아무 말도 안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시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3) 또한 역사 문제 전반에 관련하여, 무라야마 담화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의 역사 문제 처리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두 가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극동재판 및 그 결과를 받아들여 나온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1조입니다.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들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1조를 폐기하자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판에서 외국이 판단해서 결정한 것을 일본이 국가로서 받아들인 것이고, 패전을 한 일본으로서는 그 외의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인 가운데서도 찬성과 반대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일본인 자신의 판단은 없는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저는 그 후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국내에서 좌우의 여러 논의가 이루어진 결과, 그것이 하나의 형태로 나온 것이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익 쪽에서 큰 비판이 있었고, 만약 차기에 아베 내각이 들어선다면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둘 다 재검토하자는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무라야마 담화의 기초를 허물어 버리면 전후 일본이 국제사회와 화해해 온 기초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가 전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미리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Japan and Reconciliation in Post-war Asia: The Murayama Statement and Its Implications'라는 제목의 책을 편집자로서 중국, 한국, 대만, 미국 학자들과 함께 집필하여, 2012년 말에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저는 원래 1995년 무라야마 담화가 처음 나왔을 때 모스크바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을 보였다고 생각해서 러시아 현지 신문에 '일본은 이렇게 자신의 과오를 철저히 사죄했다, 다음은 러시아의 차례다'라는 취지의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담화의 지지자입니다만, 책을 쓸 때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어보니 '이건 정말 굉장한 담화구나' 하고 새삼 느꼈습니다. 그 담화에 사용된 단어들이 매우 포괄적(holistic)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했음을 명확히 밝히고 그것이 잘못임을 인정하고 사죄를 하면서도 일본, 식민지 지배, 침략 등에 대한 정의(定義)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의를 하지 않고 국가의 행동을 이런 식으로 인정하고 사죄를 한 것인데, 이런 말을 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이 표현은 이런 문제에 대한 일본인의 사상적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비교의 대상으로 독일의 케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독일의 사죄라고 하면, 1970년 당시 독일 수상 신분으로 폴란드 바르샤바 국립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표한 빌리 브란트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러나 독일의 전쟁책임에 대해 '말'로 언급한 것은 1985년 당시 독일 대통령이었던 바이츠제커가 5월 8일 독일 의회에서 행한 패전 40주년 기념연설입니다. 바이츠제커 연설과 무라야마 담화를 비교분석해 보면, 너무나도 다릅니다. 바이츠제커 연설에서는 홀로코스트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독일의 죄상이 조목조목 나열되어 있고, 독일의 특정 인물이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 독일 민족 전체는 죄가 없지만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guilty'와 'responsible'의 구분선을 명확히 긋고 있습니다. 반면 무라야마 담화에는 특정 시기나 인물에 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발상이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이런 발상이 어디서 왔는지,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대학의 철학 교수이신 모리 선생님께서 힌트를 주셨는데요. 무라야마 담화와 같이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포괄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일본적인 발상은 '스즈키 다이세츠'라는 일본의 저명한 불교철학자의 사상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일본은 이런 무라야마 담화의 정신을 재창조해 나가야만 할 텐데, 대부분의 일본인은 무라야마 담화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고노 담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앞으로 무라야마 담화가 어떻게 될지가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고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그리고 북방 영토 문제는 자세히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2012년 3월 대통령에 당선되기 4일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푸틴은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와 영토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일본과의 외교를 다시 한번 발전시켜 나가고 싶기 때문에, 영토에 대해서는 '무승부'를 목표로 교섭하자"고 발언했습니다. 저는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이 일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러시아의 발전을 위해 일본의 에너지 자원 구매력과 기술을 기대하는 것도 있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러시아는 중국과의 대립을 피하면서도 러시아의 힘을 키우기 위해 도움이 되는 파트너를 찾는다고 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내지는 가까운 장래에 푸틴이 말한 대로 '무승부'를 목표로 한 교섭이 잘 된다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일본의 국가목표

(1)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영토와 역사 문제를 공부하다 보면, 항상 상당한 암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만약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국가로서의 일본에게 남은 과제는 역시 이 밖에도 더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국으로부터도 그렇고 세계의 여러 국가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국가를 앞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일본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도 비슷한 고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그 결과로 사회보장 부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구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는 그 금액이 1천조 엔을 넘어섰고, 다음 세대에 막대한 부채를 쌓아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반드시 대응해야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해결한다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유럽에서 근무했습니다만, 유럽에서 일본에 돌아오면 특히 시골에 갔을 때 실망을 하게 되는 점이 있는데요. 지금은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일본요리점이 있고, 이세이 미야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식 코스튬 플레이(코스프레) 같은 것도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후 일본은 의식주 중에 의(衣)와 식(食)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완벽하게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는 주(住)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아마도 전후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자기중심적 민주주의'의 형태로 수용해 버렸기 때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전전에 부상했던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으로서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부분만이 강조되고 본래 일본이 가진 좋은 점이 단절되어버린 채, 개인이 좋으면 그걸로 다 괜찮다는 사상이 정착되어버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것이 일본의 주택에 가장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토지에 어떤 집을 지을지는 개인의 자유이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럽은 다릅니다. 네덜란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유럽에서도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나라이지만, 건물의 외관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는 인식이 철저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소유주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건물이 지어져 있는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건물의 형태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역시 이러한 점이 유럽의 시민사회를 만들어 온 기초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일종의 '공공성'이 일본인들에게 부족하다는 상징이 바로 일본 주택의 외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재고해 보아야 할 점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산으로서의 자연, 전통 문화, 그리고 자연과 조화된 건축물 같은 것을 재흥(再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외관'이 흐트러지게 된 배경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정신적인 붕괴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마음과 정신을 다시 한번 갈고 닦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2년 정도 전부터 여기저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주택이 주변 풍경과 조화되지 못해 보기 싫은 모습이 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하면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처음 깨달았습니다"라고 다들 동의를 합니다. 자연과 문화와 기술과 정신이 하나가 된 모습을 저는 '열린 에도'라는 개념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만, 2010년에 제가 출판한 '전후 일본이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책의 1부에 '풍경', 제2부에는 마음(心), 제3부에는 앞으로의 목표로서의 '열린 에도'의 개념에 대해 썼습니다.

(2) 그런데 이 책을 출판한 것이 계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즈오카현 지사를 맡고 있는 가와카츠 헤이타라는 분에게 초빙되어, 저는 교토산업대학의 교수직 뿐만 아니라 2011년 4월부터는 시즈오카현에서 대외관계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즈오카현의 목표는 '부국유덕 후지의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 가와카츠 지사는 본인의 저서에서 이 '부국유덕(富國有德)'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는 그 개념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메이지 시대에는 '부국강병(富國強兵)'이 국가목표로 자주 통용되었죠. 그리고 패전 후인 쇼와 시대에는 '부국평화(富國平和)'라는 목표로 국가가 운영되었고요. 그렇다면 현재 헤이세이 시대의 여러 가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부국유덕(富國有德)'의 국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단순한 강병(強兵), 평화(平和)가 아닌 것이죠. 헤이세이 시대의 일본의 표류는, 인간으로서의 덕(德)이라는 것, 혹은 마음(心)이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재정립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와카츠 지사가 생각한 이 개념의 기원은 메이지유신을 이뤄낸 일본의 위인 중 한 사람인 '요코이 쇼난'의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코이 쇼난은 쿠마모토 출신의 메이지유신 10걸 중의 한 사람인데, 메이지유신 10년 전에 '국시삼론(國是三論)'이라는 훌륭한 저서를 냈습니다. 저도 읽고 정말로 깜짝 놀랐는데요. 그는 '앞으로 메이지유신을 단행하고 국가의 문호를 열어 국가를 부유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부국(富國)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세계 무역에 전부 참가하고 국가를 강하게 하며, 해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했지요. 그러나 부국강병만으로는 안 되고, 혼(魂)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士道), 즉 사무라이의 길이죠. 그래서 문무를 겸비한 사도(士道)라는 것을 포함해 부국, 강병, 사도가 바로 삼론(三論)입니다. 결국 일본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사도(士道), 즉 진정한 인간의 혼과 내적 도덕을 잊어버린 채 부국강병의 길만을 달려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혼과 사도(士道)를 '유덕'의 형태로 되찾아가자는 것이 부국유덕이라는 개념의 뿌리인 것이죠.

이런 생각을 시즈오카현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전개한 사람이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와 그 전임인 하시모토 류타로인데, 이 둘의 '국가 만들기' 자문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당시 와세다대 교수이자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교수였던 가와카츠 헤이타씨였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2000년 오부치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을 꼭 찾아서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서 오부치 총리는 "저는 지금 일본의 어린 세대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일본이 세계 속에서 존경 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 세계인들에게 존경 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그 목표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앞으로 일본은 '부국유덕'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국가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의 실질적인 리더 역시 바로 가와카츠 헤이타씨였습니다.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가 3년 정도만 더 집권을 했더라면, 저는 일본의 국가만들기도, 일본과 주변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오부치 총리의 전임인 하시모토 전 총리가 내세운 아름다운 국토의 '21세기 국토의 그랜드디자인'이라는 컨셉의 기본은 'garden island'인데, 이 컨셉을 창안한 사람도 가와카츠 헤이타씨였습니다. 여러모로 보면 이러한 하시모토, 오부치의 컨셉 중에서 일본의 자연을 소중히 하고 자연과 조화된 부드러운 일본을 만들어 가자는 발상의 원점에는 가와카츠 헤이타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역사는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0년대 일본이 기적적인 고도경제성장을 이룬 다음 앞으로 어떤 일본을 만들어갈까를 생각했을 때, 1972년 다나카 가쿠에이의 '일본열도 개조론'이라는 구상이 나왔고 그것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본열도 개조론'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일본의 '표면'과 '실질'의 경제적 격차를 없애서 말하자면 국가 전체를 '표면적인 일본'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전체를 도쿄처럼 만들고 신칸센, 고속도로, 비행항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국가 전체를 개발하고 1일 경제권으로 만들자는, 간단히 말하자면 그런 논리가 됩니다. 그 결과 지방의 각 지역들이 '미니 도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딜 가더라도 재미가 없고, 신칸센의 어느 역에 내리더라도 역 앞이나 거리 풍경이 다들 비슷합니다. 개성이 전혀 없고 사실은 편의성에만 신경을 써서 보기 싫게 된 풍경을, 일본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 좋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오히라 전 총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일본인에게는 다들 원래부터 살고 있던 '고향'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는 또 산과 강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을 살린 국가 만들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그는 '전원도시 국가구상'을 표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상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오오히라 총리가 현직 총리의 신분으로 별세했죠. 저는 오오히라 총리도, 오부치 총리도 현직에서 별세함으로 인해 정권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 것을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아쉬웠던 것은, 오오히라 정권 바로 다음에 나카소네 정권이 들어섰죠. 저도 그분을 모시고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물론 나카소네 전 총리도 총리로서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나카소네 총리의 발상 중에는 아쉽게도 오오히라 정권의 국가만들기를 이어받으려는 의식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부치 정권 바로 다음에 고이즈미 정권이 들어섰는데, 고이즈미 전 총리도 나카소네 총리처럼 일본을 밖을 향해 개방하려는 철칙을 가진 총리였지만 하시모토와 오부치 정권에서 이어온 '부드러운 일본'을 만들려는 발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국가 만들기'의 큰 두 가지 흐름은 다 나카와 오오히라의 구상이지만, 그 중에 결국 강하게 남은 것은 다나카의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베 정권이 들어섰을 때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국가 만들기'도 어찌 될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자민당이 지난 2012년 8월에 '국토강인화기본법안(強靱国家法案)'이라는 것을 제출했는데,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여 년 동안 경제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민당 정권이 '콘크리트에서 인간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저는 처음에는 '드디어 정말 훌륭한 컨셉이 나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드러운 일본을 만들자'는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자연을 통해 인간의 마음과 감성을 소중하게 여겨 나가는' 발상과는 전혀 달랐고, 실제로 잘 실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3.11 동일본대진재가 일어났죠. 이 재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은 너무 늦었습니다. 관동대지진 때는 고토 신페이가 유사시의 대응을 해냈던 반면, 민주당 정권은 3.11때 유사시의 대응을 그다지 효과적으로 하지 못했죠. 전부 평상시대로 대응을 하려니까 모든 게 다 늦어졌던 겁니다. 게다가 지금 언론에서는 후지산 폭발이나, 난카이 대지진 같은 재해가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피해 규모는 몇십 배가 된다, 그러니 지금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는 기사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심도 불안해 지겠지요. 그 결과 '국토강인화기본법안'이라고 하여, 재해대책을 위해 일본 전체를 다시 한번 강철이나 콘크리트 같은 걸로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공공사업의 재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공사업은 '전후 일본을 붕괴시켜 온 아편'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의 본질은, 국가가 지방에 자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자금을 요청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가장 큰 임무가 되고,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지역의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가, 혹은 스스로의 가장 좋은 점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을 하지 않고, 그저 중앙정부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게 되죠. 다나카 가쿠에이는 그런 식으로 서서히 일본의 심성을 바꾸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헤이세이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의 기저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저 자기중심적으로 자금을 기다리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콘크리트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될 테니, 사실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공공사업이 지니는 이런 무서운 점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민당 정권이 들어서서 다시 한번 공공사업을 일으킨다고 하니 또 다들 자금을 기다리고만 있는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것

은 정말 유감입니다. 다만 희망적인 것은, 교토나 시즈오카 등 지방에서는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지방을 기반으로 삼아, 좀더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더욱 아름답고 평화로운 일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본인들이 다시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 논의하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역시 일본인들에게 어떤 좌절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좌절감이 때로는 중국이나 한국에 대한 적대감 속에 흘러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은 제발 하지 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상대국은 더 강하게 반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단순히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목표'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부정적인 심리가 안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교관으로서 일해왔던 것도 있겠지만, 저는 역사의 진보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본'을 만듦으로써 '좋은 세계'를 만들어 가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든 그 과정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역시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진 좋은 점들을 끌어내고 일본인이 가진 가장 좋은 것들에 집중함으로 인해, 배외적인 민족주의로 감정이 흘러가는 것을 막았으면 합니다.

■ 토론

Q1) 우선 코멘트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선생님께서는 '일본 정부의 범죄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한국측의 입장이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한국측이 추궁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법적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방영토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북방영토 문제를 일본 정부가 ICJ에 제소하겠다는 말을 꺼낸 적은 있었는지요.

A1) 우선 북방영토 문제는, 70년대에 한번 일본이 ICJ에 제소하겠다고 소련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만 했을 뿐이고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계속 문제를 유보하는 것보다는 ICJ에서 해결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한 안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역시 제소가 아니라 교섭에 의해 해결을 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그렇게 뭔가 일본과 러시아가 노력을 해서 하나의 공동의 산물을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매우 큰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제소라는 것은 일본과 러시아의 교섭 능력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말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요.

그러나 사실 또 하나 문제가 더 있습니다. ICJ에 가져간다고 해도 승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와다 하루키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의 일본의 입장은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무성도 '니시무라 답변'이라는 것이 있으니 부정할 수 없겠고요.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앉아 있는 바로 앞에서 조약국장이 답변을 한 것이니까 그것이 국장 개인의 생각이 아닌 것은 명백하지요. 요시다 시게루 자신이 직접 말하는 것은 피하고 싶었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할 때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이 조약에 의해 구나시리와 에토로후 두 섬의 영유권은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었겠죠. 따라서 소련이 서명을 했다면 아마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겠지만, 결국 소련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이때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이, 전후 소련 외교에서 가장 큰 실패 사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아무것도 결정이 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일본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1955년부터 56년까지에 이르는 교섭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할 때, 일본은 구나시리와 에토로후 두 섬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죠. 저는 북방영토관계의 업무를 맡게 되면서, ‘포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 잘못되었다고 말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당시 두 섬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발언은 삼가게 되었습니다. 역시 북방영토 문제를 ICJ에 제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책임’이라고 표현한다 해도 일본 정부가 그런 책임을 지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역시 일본측의 근본적인 생각은, 일본이 저야 할 책임은 ‘인도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라는 점이며, 일본측은 이 점을 부디 인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Q2) 도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발상을 하자’는 생각에는 저도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만, 한일관계를 생각하면 현재 영토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센카쿠는 어떤 의미로 보면 중국의 부상이라든지 항해선이라든지 중일관계의 커다란 구조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북방영토도 일본의 바로 앞에 있으니 안보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 포기할래야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독도는 그런 손익계산이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국에게 존경 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한국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테니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라도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A2) 포기하는 것은 역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양국이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과정들이 있습니다. 원래 북방영토와는 위상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면, 가능한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케시마에서 상대국에 인기가 있는 가수의 콘서트를 연다든지 교류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어떤 형태로든 다케시마 문제를 두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Q3)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국유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내년에 신정권이 들어서면 ‘유덕’은 제쳐두고라도 ‘부국’이 될 수는 있을까요. 그 전망에 대해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교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영토문제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2012년 7월의 센카쿠 국유화 정책이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그다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으셨는데, 국유화에 관해 일본 정부는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방침을 바꾸어서 2013년부터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방법을 모색해 나갈지요.

A3) 국유화에 관해서는, 저는 전부터 빨리 국유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일본의 국내법에서는 소유권을 가진 쪽이 확실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지금 해상보안청이 섬에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섬의 소유권자가 소송을 걸게 되면 이길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역시 센카쿠 문제는 이렇게 국가 정책 차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상황으로 보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가 섬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 것이죠. 이런 점은 국제법상의 권능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2년 4월 이시하라 신타로가 “센카쿠를 도쿄도가 매입한다”고 말한 후부터, 노다 정권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역시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중

국과 어떤 식으로 사전 협의를 했느냐 하는 문제겠지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고, 중국에서는 '센카쿠 국유화는 일본의 음모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만약 일본 외교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저는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진짜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국이 될 수 있는지의 전망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공공사업보다는 아베 정권의 금융완화정책으로 어떻게든 활로를 찾을 수 있다면 그런 식의 정책을 펴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Q4) 저는 2년 전까지 일본에 있었는데, 가와카츠 헤이타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아마존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혁신 보수'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제언을 하는 책들이 있는 반면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반중, 반한, 그리고 때로는 반미의식을 부채질하는 듯한 우익보수 같은, 내셔널리즘적 흐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 정권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일본에서는 어떤 사상 쪽이 더욱 강해질 것인가, 이 점에 대해 선생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A4) 저는 외무성을 떠날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민 중에, 다시 한번 대학으로 돌아가서 더욱 깊이 공부를 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더 이상 내가 정치를 하지는 않겠지만 공부를 더 해서, 설령 남들이 받아들이 주지 않더라도 '나의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주장하자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주장해 왔고, 사회 속에서 정말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에 관한 논쟁에 참가하고 있는 입장에 지금은 서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너무 극단적인 우익과 지금은 약해져 있는 좌익이 있고, 지금은 웬지 세상의 흐름이 우익 쪽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느낌은 저도 듭니다. 단, 그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혁신 보수'와 같은 입장을 더욱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지요. '혁신 보수'가 강해짐으로 인해 조금 더 균형 잡힌 상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우경화되고 있으니'라고 끝내버리고 체념해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최대 문제점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만화 한 권 읽고는 그 내용을 전부 그대로 믿어버리거나 하는 경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좌파든 우파든 여러 가지 관점의 견해를 접하고 스스로 생각해라"라고 저는 열심히 말하고 다닙니다만, 생각만큼 좀처럼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끝/